최신 보험 정보

2026.11.09.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 2026.10.21.

최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6.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꾸준히 증가. 연금저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상품가입 및 연금수령 등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이해부족에 따른 연금 관련 분쟁민원 또한 지속 제기. 이에...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 2026.10.29.

금융감독원은 '26.10.29.(목)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금융감독당국은 손해율,사업비 등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합리적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동 간담회는 개정된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까지 꼭 챙기세요

금융감독원 | 2026.11.01.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보험24(www.ins24.go.kr)의 '시민안전보험 조회'를...

사회초년생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합니다

금융감독원 | 2026.11.02.

사회초년생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인 제도를 안내합니다. 〈 운전경력 인정제도 및 특약 〉 ① 군 운전병 복무 운전경력 →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가능(최대 3년). ②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가능(최대 3년). ③ 종피보험자 무사고 경력(최근 3년내)...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제재

금융위원회 | 2026.10.29.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대해

청문을 실시('26.8.26.)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 29명(보험설계사 28명,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하여 「보험업법」 등...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2026.10.30.

정부는 10.29.(목)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6.2.6. 퇴직연금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全 사업장 퇴직...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우선 투입, '27년 1월부터 본격 수가 구조 혁신

보건복지부	2026.10.28.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8일(수) 오후 2시에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

"배우자 동의는 모바일로 바로, 추가 서류 제출은 나중에"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문턱 낮춘다

보건복지부	2026.10.29.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10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으로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 증빙 서류가 당장 없더라도...

입법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2026.10.23.

현행법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달리 본인부담상한제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상한제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2026.10.26.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 수급 시 연금액의 20%를 일률

적으로 감액하고 있어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 2026.10.28.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금융중개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 2026.10.28.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 2026.10.28.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의무가 예산편성 여부나 규모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어 장기요양보험 재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2026.10.30.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이후 상한액이 유지되어 억지력이 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정보...